

충남리포트 제132호

ChungNam Report

2014. 10. 08.



CONTENTS

〈요약〉

1. 지역에너지 전환의 의미
2. 국내 지역에너지시스템과 충남의 에너지 실태
3.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 전환 담론
4. 핵심정책과제 제언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학부 교수, ttochi65@hs.ac.kr
이정필 ·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론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요 약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정의가 취약해짐
-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건강 · 환경 · 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부정의(unjust)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사례 분석과 충남의 에너지 문제(화력발전소 및 송 · 변전설비 집중화, 에너지소비 증가 등)를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제도(RPS) 개선과 발전차액지원제도(FTT) 부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발전소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지원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지역에너지 전환의 의미◀

01

- 자원과 에너지라는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 모델은 국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부문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값싼 화석연료와 수자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구조에 기초함
 - 즉,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피해는 발전의 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에, 발전의 편익은 특정 성장거점 지역에 집중됨
- 정치·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대단히 불의한(unjust) 발전 모델이 그동안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성장을 통해 평균적인 의미에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임
 -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이 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창출 등을 통해 국민복지의 평균적 수준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이런 발전 모델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고도 경제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수 없음
- 석유생산정점,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저성장의 일상화가 예고됨
 - 석유생산정점(peak oil)의 도래로 인해 값싼 에너지 이용 시대는 조종(弔鐘)을 울리기 시작함. 석유생산정점에 도달하면, 현재처럼 편리하게 석유를 쓸 수 없으며, 배급제, 물가 폭등, 교통대란, 의약품·식료품 품귀현상, 사회불안과 약탈 등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은 저하되기 시작함
 -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이변이 갈수록 잦아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폐

수나 산업폐수,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폐기물 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해결 비용의 내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함

-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은 다분히 화석연료 의존적이며,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음. 다시 말해서,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되고, 산업인력은 계속 제공되며, 기술혁신이 계속 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발전 개념임.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가정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진실임

●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 및 수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지속가능성 성과는 높지 않은 실정임. 오히려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관행이 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개발사업이 주를 이룸

●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 핵발전소 비중 논란, 송전탑 갈등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으로 부상함

- 기술-사회적 측면에서 ‘거대 기술 시스템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밀양에서 발생한 주민 등의 송전탑 반대운동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 시골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시스템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공감한다’가 49.3%, ‘공감하지 않는다’가 31.2%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음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2013)

국내 지역에너지시스템과 충남의 에너지 실태◀

02

1) 국내 지역에너지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

(1) 지역간 에너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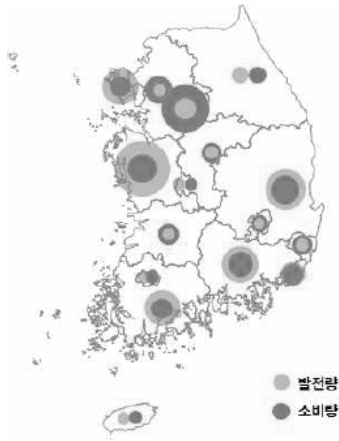
- 국내 에너지시스템은 중앙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한계로 지역의 ‘에너지 주권’이 극도로 제약되어 왔음
 - 이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관리에 실패하기 쉽고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일으킴
 -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및 불일치로 인한 불평등은 에너지 소비 지역의 역외 에너지 의존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입지 갈등과 전력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함

(2)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최종에너지 중 전력의 공간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국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을 위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임
 - 그러나 전력자립도가 56.7%에 불과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립도는 각각 3.0%와 24.5%로 낮지만, 인천시는 3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함. 엄밀하게 말해서 전력수급과 공간적 불균형은 일차적으로 서울·경기와 타지역 간의 불균형인 셈
 - 수도권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을 다른 광역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력자립도가 100% 넘는 지역이 100% 미만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1〉 지역별 전력자립도(2011)



(단위 : GWh)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립도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립도
서울	1,384	46,903	3.0%	대전	156	9,060	1.7%
인천	68,953	22,241	310.0%	충북	1,580	20,453	7.7%
경기	23,791	97,003	24.5%	충남	118,041	42,650	276.8%
수도권 56.7%				충청권 166%			
부산	39,131	20,562	190.3%	광주	37	8,047	0.5%
대구	198	14,822	1.3%	전북	7,181	21,168	33.9%
울산	10,750	28,198	38.1%	전남	69,481	27,137	256.0%
경북	71,706	44,167	162.4%	호남권 136.1%			
경남	69,579	33,071	210.4%	강원	12,047	15,876	75.9%
영남권 135.9%				제주	2,878	3,710	77.6%

* 자료: 고재경(2013: 9)

● 전력소비 증가율(2002~2011)은 충청남도가 연평균 17.6%로 전국 평균(5.6%)보다 높으며 그 다음이 경기도가 8.0%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입지와 관련됨

-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전력 소비의 70% 이상을 산업에서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두드러짐. 반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 대도시 지역은 가정·상업 부문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도는 산업(49%)과 가정·상업 부문(44.2%)이 비슷한 비중을 보임
- 이렇게 산업 집적과 인구 집중이라는 두 요인에 따라 전력 사용량과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은 달라짐

(3) 새로운 불평등 요소: 송전탑과 송전망

●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송전설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발전설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이어 송전설비를 둘러싼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 문제가 제기됨

- 2000년대부터 송변전 설비 건설에 대해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논란이 커짐

- 송전탑으로 상징되는 전력계통은 주로 해안가의 핵발전 단지(고리, 월성, 영광, 울진)과 화력발전(충남 당진, 인천)에서 수도권과 공업단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확대되었고, 발전소가 대형화·단지화됨에 따라 154kV, 345kV, 765kV로 점점 고압으로 가압됨
- 765kV 송변전 사업은 2002년 신서산 및 신안성변전소를 준공함으로써 당진화력-신서산-신안성 간 177km가 765kV 전압으로 운전을 시작하게 됨. 울진 핵발전소 3, 4호기 준공에 따라 수도권에 연결된 765kV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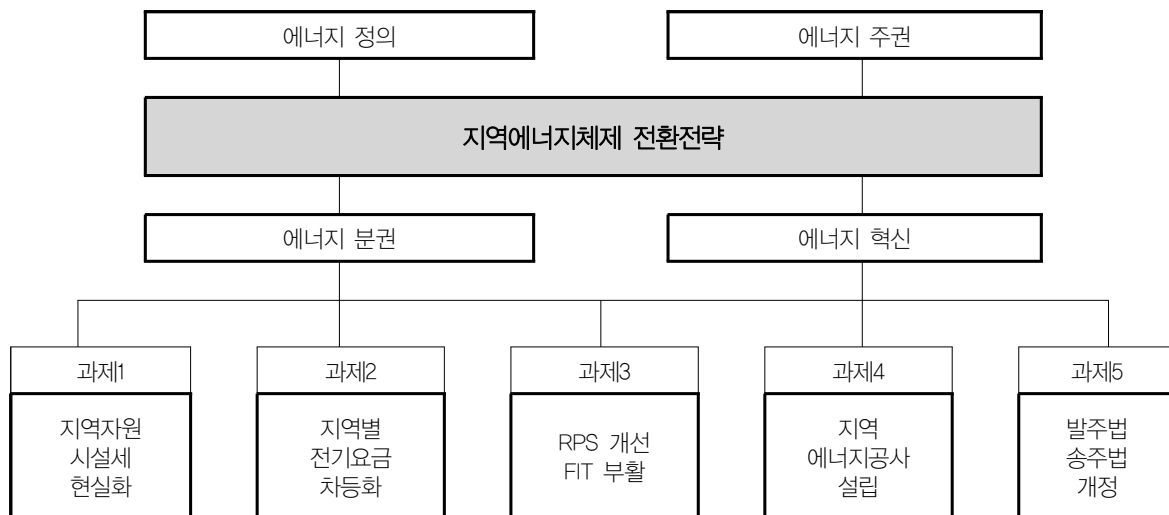
(4) 충청남도의 에너지 실태

- 충청남도는 2011년 기준 총 51.4백만 석유환산톤(TOE)의 석탄, 석유 등 1차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소비량(276.6백만TOE)의 18.6%를 차지함(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충청남도는 2011년 기준 118,040.7GWh의 전력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국 전력생산량의 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함(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이 중 충청남도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2,650.1GWh(전국소비량의 9.4%)로 생산된 전력의 36.1%만이 내부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발전 형태로는 석탄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압박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함

03

▶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시스템 전환 담론

- 신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볼 때 기존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정의’와 ‘에너지 주권’의 약화라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에너지시스템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분권과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국외에서는 에너지의 재지역화와 공유화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충남이 당면한 문제(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집중, 에너지소비 증가 등)를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개선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 재도입,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발주법)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지원법(송주법) 개정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제안함



〈그림 1〉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 구상

(1)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의 부존자원을 채굴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자원이나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자원분(발전용소, 지하수, 지하자원, 핵발전, 화력발전)을 개발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 따라서 핵발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주장이 가능한데, 비록 핵발전과 위험 형태와 피해 강도와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특히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핵발전에 부과하는 세율 수준(0.5원/kWh) 이상으로 가능함
 - 이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충청에너지공사’ 출연 등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에 사용할 경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 송배전비용의 발생 원인자가 송진비용과 송전손실 비용을 부담하도록 전력생산지와 전력소비지의 거리에 따른 송배전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2013)’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등이 한전의 송전망에 접속하고 이용할 때 송전접속요금과 송전이용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송전이용요금의 사용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부과함
 - 송전이용요금의 사용요금은 발전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수도권북부지역(0.80원/kWh), 수

도권남부지역(1.64원/kWh), 비수도권지역(1.97원/kWh), 제주지역(0.75원/kWh)으로 구분되고, 수요자의 위치에 따라 수도권지역(2.84원/kWh), 비수도권지역(1.70원/kWh), 제주지역(8.42원/kWh)으로 구분

- 수요자 위치에 따른 송전이용요금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충남(비수도권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1.14원/kWh의 송전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송배전비용이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그 차이가 충분히 클 경우 충남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등 분산형 전력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고, 이는 추가로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운영으로 인한 충남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RPS 개선과 FIT 부활

●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미진한 성과와 잘못된 설계로 오히려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는 의무할당제(RPS)를 개선하고 현재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 2012년에 도입된 의무할당제(RPS)는 에너지공급·판매업자(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2012년 2.0%, 2022년 이후 10.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충남의 잠재량 및 발전량 등이 반영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도입이나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낮은 입찰경쟁력 보완 등의 제도 개선에 적극 개입해야 함
- 현재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충남도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어서 소형태양광에서 생산한 REC를 고정가격으로 전량 매입하고 매입한 REC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도입 가능함(서울시 자체 FIT 제도 참고). 이렇게 하면 소형햇빛발전 사업자는 태양광에 투자하면 전량 판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태양광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임

(4)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 해외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지역에너지공사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환경-사회관계를 회복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갖는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있어 지역에너지공사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적으로 지역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진단,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분산형 에너지 보급,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 제안됨
- 실제로 2012년 7월 1일에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전담기구로 발족했으며, 특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됨
- 바람이 갖는 공유적 특성상 바람자원은 공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부담금) 또한 제주도민에게 지불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함. 이런 바람의 에너지 ‘자원화’와 ‘공평화’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매개가 될 것으로 보임

● 지역에너지공사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자립조례’, ‘지역에너지기금조례’, ‘지역에너지공사조례’가 필요함

-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지역에너지공사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수요관리와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체제 전반을 관장하도록 확대·강화되어야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운영과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과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다수의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함. 원자력발전(0.5원/kWh)과 화력발전(0.15원/kWh, 2014년 시행)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에너지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의 자연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 이익환원장치를 만들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주법)과 송변전시설주변지역보상지원법(송주법) 개정


● 발주법과 송주법은 그 법안의 취지 자체로 보면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의 입지로 지역이 받게 되는 피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률임

- 따라서 지금까지 지적받아 온 발주법 그리고 송주법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송주법에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두 법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선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발주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피해실태와 지원범위 불일치	- 법개정을 위한 폭넓은 실태조사에 근거해 ‘주변지역’ 범위 확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핵발전소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2~8km, 화력발전소 온배수 및 대기오염 확산 범위가 3~6km 정도로 나타남)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재(핵발전소와 형평성)	- 현행법상의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구분을 없애고 “2.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개정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부재(송주법에도 적용)	- 자치단체, 주민 등에 지급된 지원금의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정산결과, 결산내역, 사업평가 결과 외부공개 -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의 환수 의무화 및 반환 강제 장치 마련 - 부정수령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정 마련
사업선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송주법에도 적용)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에서 설명하도록 의무화, 공고 사항과 방식에 대한 규정 마련 - 주민신청 사업내역 홈페이지 장기간 게시
주민지원과 무관한 사업 빈발(송주법에도 적용)	- 사업자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주민들의 안전, 건강, 복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 사업으로 개선 - 사업자지원 대상사업별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장학금수혜자 자격요건, 확인서류 등에 대한 통일된 세부지침 마련, 부정수급자 확인 및 환수 장치 마련
결정과정 불투명(송주법에도 적용)	- 심의지역위원회 위원에 주민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고, 위원의 연임 횟수 1회로 제한, 이해당사자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 - 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 및 회의내용 전체 공개 의무화 -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근거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송주법의 경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례로 30미터 거리는 보상하고 31미터 거리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주민들의 피해증언 등을 고려해 보상이 필요한 범위는 현재 통과된 송주법보다 훨씬 더 넓다고 보임
-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보상과 관련된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 결과도 갈등 중재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조사가 수행된 것이라 밝히고 있음. 실제 지하 하락 범위를 기존 송전선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피해범위는 훨씬 더 넓게 나올 가능성이 높음 

〈표 3〉 송주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154kV 주변지역 제외	- (법조항 개정) 154kV 송전선로도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포함
재산적보상 범위 협소	- (법조항 개정)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765kV는 80미터, 345kV는 20미터, 154kV는 10미터까지를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지정
선하지보상 범위 확대 제외	- (법조항 개정) 선하지 보상범위를 기존의 일률적인 3미터가 아니라 765kV는 최외선에서 9미터, 345kV는 최외선에서 5미터, 154kV는 최외선에서 3미터로 차등화 및 확대하여 규정
건강권피해 보상 부재	- (법조항 신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전자파의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및 환경영향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는 기구를 환경부에 두도록 규정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대표기구 규정 부재	- (법조항 신설) 입지선정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 -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단체의 구성과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자와의 협의 사항을 규정
영농영업손실 보상 부재	- (법조항 신설) 영농영업 손실 등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보상 시 주민단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규정

이 상 현 교수
한신대학교 정조교양학부
031-379-0722, ttochi65@hs.ac.kr

이 정 필 상임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scmaru3440@daum.net

이 보 아 상임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boah8596@naver.com

※ 본 연구는 ‘신규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2013)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충남발전연구원
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참 고 자 료 ◆

- 고재경(2013),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 국회의원 김제남·박원석·서기호·심상정·은수미·장하나·정진후·조경태·홍의락. 녹색당. 전국
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토론회 자료집(2013. 9. 26).
- 셰어, 헤르만(2006), 에너지 주권, 배진아 옮김, 고즈윈.
- 셰어, 헤르만(2013), 에너지 명령, 모명숙 옮김, 고즈윈.
- 왕영두 외(2009), 미국 주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조사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2.
- 이정필 외(2012),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호.
- 이화현·윤순진(2013),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경제와사회, 2013년
여름호(통권 제98호), pp.40-76.
- 충청남도(201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전력공사(2006), 송배전 백서 2006.
- 한국전력공사(2013),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2013. 10. 10), ‘밀양사태와 전자파문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연론조사 결과보고서.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산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흥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